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02
----------	------

발의연월일 : 2024. 10. 31.

발 의 자 : 전재수 · 박선원 · 이재관
이용선 · 복기왕 · 김재원
송기현 · 김정호 · 박정하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
-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2).
- 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업무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를 “표지 게시, 증표 제시 및 제3항에 따른 표기에”로 한다.

③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횟수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재산상태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손해배상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의 요청으로 설명할 때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

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계획(이하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 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그 위반사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3.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보상할 금액,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을 “시정명령, 중지
명령 또는 제출명령을”로, “시정하거나 중지하지”를 “시정, 중지 또는
제출하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
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생 략)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6. ----- ----- -----
가. <u>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u>	<u><삭 제></u>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2조의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u>

	<u>겸영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u> <u>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u> <u>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업무 중</u> <u>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u> <u>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兼</u> <u>營)하지 못한다.</u>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u> <u>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u> <u>등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u> <u>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u> <u>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u> <u>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u> <u>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u> ④ -----표지 게시, 증 표 제시 및 제3항에 따른 표기 에----- -----.
③ <u>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u> <u>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 해배상책임) ① <u>금융상품판매</u> <u>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u> <u>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u> <u>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u>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 해배상책임) ① ----- ----- <u>인</u> ----- -----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신 설>

5.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횟수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재산 상태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44조의2(손해배상액 추정)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
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
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
융소비자의 요청으로 설명할
때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
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
의 총액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
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
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경우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계획(이하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

<신 설>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과

2. 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
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그 위반
사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3.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보상할 금액,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4항에 따른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p>1. ~ 3. (생략)</p> <p>4. 금융위원회의 <u>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u>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u>시정하거나 중지하지</u> 아니한 경우</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제출명령</u>----- ----- --<u>시정, 중지 또는 제출하지</u>-- -----</p> <p>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